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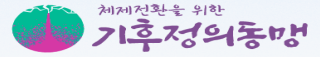
<토론회>

2024총선,

기후정의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8월 10일(목) 오후 2-5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자료집]

2024총선, 기후정의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 2023년 8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차례와 목차

발제			
14:00~14:20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과 총선대응 총선을 앞둔 한국의 기후정의운동,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까?	한재각, 김건수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1p
토론			
14:20~14:30	[토론1] 기후정치의 가능성과 기후운동의 역할	황인철 (녹색연합)	20p
14:30~14:40	[토론2] 2024총선, 반윤석열 전선을 넘어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가능성	미류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24p
휴식			
14:50~15:30	[토론3] 총선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의 기후정의운동과의 연대전략		
	3-1 노동당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32p
	3-2 녹색당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	37p
	3-3 정의당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41p
	3-4 진보당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	46p
휴식			
15:40~16:30	전체토론	참가자 전체	

[발표]총선을 앞둔 기후정의운동,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까?

한재각, 김건수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회)

1. 들어가며

-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기후운동도 더욱 활성화되고 또 급진화되고 있다.
기후운동은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기후불평등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후불평등의 해결이 기후위기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주류 기후운동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기후정의운동을 분화시켰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체제전환’을 내세우는 기후정의운동은 빠르게 진전하면서, 여러번의 대규모 행진을 통해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가고 있다. 그러나 기후재앙으로 방치하는 현실의 권력 관계에 균열을 내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낼 기후정의운동의 강력한 ‘사회정치 세력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내년(2024년) 4월 총선은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시도하는 중요한 계기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현실의 지배적인 세력들 사이에서의 권력 관계를 재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매번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세력들에게는 값비싼 패배와 실망만을 안겨다 주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지만, 현실 정치권력 구조가 변화하는 계기이자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오히려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를 구체화하고 제고하는 계기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정의)운동의 고유한 시간 감각으로 보았을 때도 이번 총선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즉, 급격히 감소하는 탄소예산 속에서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현행 정치권력의 구조 변화가 절박하다.
-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에 대한 요청은 보수양당 체제의 상대적인 개혁적 분파의 자장 속에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운동이 결박되어 온 오랜 관행을 벗어나려 반복해온 시도의 일부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이런 시도들은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다. 체제전환의 비전을 명확히 하며 보수양당에 의탁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정치 세력화에 나서고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모습이나, 혼란스럽고 무기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진보정당들의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도라고 다를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 도저히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에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기에, 다시 같은 길을 (그러나 희망하건데 다른 방식으로) 걸어볼 방법을 궁리해보려는 것이다.

2. 기후정의운동은 왜 정치세력화를 필요로 하는가

1) 한국의 정치 상황: 윤석열 퇴진운동의 불가피성과 후퇴하는 전망

-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 만에 퇴진운동에 직면할 만큼 무능과 퇴행을 거듭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적지 않다. 기후정의운동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현상유지적 반기후 공세를 막아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니 윤석열 퇴진운동이 그려내고 있는 반-윤석열 전선은 기후정의운동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판단과 조심스러운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지난 ‘촛불항쟁’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잠시나마 기대하게 만들었다. 탄핵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에 의해서, 다음 해 대선에서 극우 정당이 정치적으로 파산하고 보수양당 구도도 해체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내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 기후/생태위기를 포함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통치 형태는 다르더라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공유하는 보수양당의 정치적 동질성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연장을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응답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은 더욱 강화되었고 대중들이 요구해온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은 다시 나중의 일로 미뤄졌다. 그 결과로 촛불항쟁이 열어낸 정치적 공간은 닫히고, 정치적 극우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던 사회운동도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치적 구도 아래 결박당한채 새로운 길을 열어내지 못했다.

-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윤석열 퇴진운동이 결국 총선 시기 민주연합론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기후정의운동의 고민이 시작된다. 기후정의운동은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비판하며 기후의제를 대중화하는 동시에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급진적 운동으로 성장해왔다. 기후정의운동은 ‘탄소중립’ 목표와 실현할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책만의 변화가 아닌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정의운동은 대항적 정치가 민주연합론으로 퇴행될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들고 있다.

2) 사회정치세력화 그리고 총선

- 사회정치 세력화는 드러나는 위기의 책임을 부인하고 전가하며 그 해결책을 자신의 방식으로 틀지우려는 기존의 지배적 사회정치 세력에 맞서, 생존과 삶을 위협받는 이들이 정의로운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실현시키려는 집합적인 의지와 대중적 힘의 결집이라고 정의해보자. 여기서 세력화를 정치적인 것, 더 좁게는 제도정치 내의 공식적인 권력만으로 종종 이해되지만, 비제도적 장에서 사회문화적 방식으로 스스로 조직하여 집합적 힘을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흔히 더욱 주목받는 정치세력화는 폭넓고 강력한 사회세력화를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며, 또 방향을 잃지 않는다.
- 한편 사회정치 세력화는 기존의 사회정치적 지형 속에서 모색되고 시도된다. 보수양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분점하고 있는 정치권력 구조,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 평가받는 민주당의 자장 속에서 체제전환의 전망을 제약받고 있는 사회운동, 먼저 정치세력화의 길에 나섰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조건 속에서, 사회정치 세력화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명백히 불리한 조건들이기에 세력화의 논의는 회피되어왔지만,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오히려 절실하다. ‘체제전환’의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언젠가 논의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정책 요구들을 현행 체제에서 관철시키면서 전환의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논의다.

-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 시도는 파편적이며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도 부족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난 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규모 대중행동에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대중참여의 대규모성을 강조할수 있지만, 3만여명 규모는 다른 대중집회에도 종종 관찰되기에 이를 과장할 필요도 없다. 또한 ‘기후정의’와 ‘체제전환’ 구호는 아직은 낯설며 그 이해도 상이하다. 그만큼 구호의 내용이 충실히 채워져 있지 못하다. 운동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여전히 비주류의 그리고 부문의 의제이며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은 지배적인 해석의 틀이자 해결 방향은 아니다. 여전히 운동은 현행 체제의 현상유지적 지형 속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 못하며, 그만큼 보수 양당의 정치질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 총선이 코앞에 닥쳤다. 기후재난이 현실화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구체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해결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총선은 그런 요구들이 분출되는 중요한 계기다.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도 이를 계기로 전개될 때 힘을 얻는 수 있다. 물론 지선과 대선이 연이어지기에 이번 총선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또한 선거만이 세력화를 논의하고 시도할 계기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 내의 일부를 포함해 제도정치의 ‘우경화 경쟁’이 계속된다면 기후정의운동의 진전과 그 세력화의 가능성 역시 점차 축소될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위기도 악화되고 있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3) 세력화의 쟁점들

- 첫째(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는 기후후보 출마 혹은 제도정당과의 협력 문제로 단순히 치환될 수는 없다. 선거 후보들과 정당들이 이런저런 기후정책을 공약하고 추진한다는 것만으로 운동의 세력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탄소중립’을 떠들어댔지만 <가덕도신공항법>에서 기후정의운동을 배신했던 민주당과 의원의 존재를 상기해야 한다. 운동의 세력화는 체제전환을 지향하고 기존의 보수양당의

정치질서를 비판하고 돌파하려는 집합적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전망을 공유하는 대중운동(들)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보수양당 틀 밖에서, 특히 민주당과의 분별정립되는 정치적 틀거리에서 정치세력화를 구상하고 시도해야 한다.

- 둘째, 현재 기후정의운동은 주로 대규모 대중행동을 통해서 사회세력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 정치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더 많은 수의 대중들의 더 잦은 결집과 더 급진적인 직접행동의 감행으로 현재 정치체제를 압박하는 전선을 아스팔트 위에 형성해야 하지만, 그 대중의 힘이 여의도와 용산(나아가 지역 곳곳)의 현행 제도정치 안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개를 마련할 공리도 필요하다. 대중운동의 힘이 언론보도 혹은 기존 정치체제 내의 일부 호의에 의존해서만 공론장에서 실체화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기후정의운동의 목소리가 직접 제도정치 안에서 존재해야 하며, 운동과 협력하고 대변하는 기후정치인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
- 셋째,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의 협력을 재고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기후정의운동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지만, 제도정치 내에서 싸우고 또 선거를 준비하면서 는데 제도정치와 거리를 두었던 사회운동과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할 경우, 진보정당과의 협력 문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지금의 진보정당(들)은 기후정의운동의 정치세력화의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는가는 질문부터 나올 수 있다. 하나의 부문 의제로서가 아니라 ‘체제전환’의 비전으로서 ‘기후정의’ 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담는 그릇이라면, 현행 진보정당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에 진보정당들이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후정의운동 세력화의 구체적인 경로가 그려질 수 있다.

3. 기후정의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자

-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된 기후운동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의 정치 공간에서 기후의제를 정치화하려고 시도했었다. 또한 기후운동과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던 정의당과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도 두 선거에서 기후를 핵심 의제로 삼아서 정책을 제시하면서 참여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래에서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서,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아래의 글은 별첨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시기의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의 대응’을 축약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라)

1) 2020년 총선

- 2020년 총선을 맞이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결집한 기후운동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기후정책에 관한 질의와 약속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보수정당에서부터 진보정당까지 모든 정당들에게 기후공약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약속의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에게 기후정당과 기후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요청하였다.
- 정책 제안을 대다수 정당이 수용했고 동의한 후보들 중에서 당선자들도 70명이나 되었기에, 비상행동은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한 국회는 국내외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투자 중단이라는 시급한 과제는 외면했으며,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법’에 ‘탄소중립’의 장식을 달아주고, 노동자들이 요구한 <정의로운전환법>은 왜곡하고 배제하고 있다. 심지어 기후위기와 생태학살을 악화시킬 <가덕도신공항법> 제정도 주저하지 않았다.
- 정의당과 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기후위기를 개별 부문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다루는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성과는 저조했다. 정의당의 의석은 오히려 줄었으며 녹색당은 제도정치 진출에 거듭 실패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을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소개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장 적극적 기후정당으로 평가되었던 녹색당은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다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2) 2022년 대선

- 2022년 대선에서도 기후운동 진영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책 요구를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에 대한 질의와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알려져 유권자가 투표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2021년 12월, 10대 정책 요구 발표, 이어서 2022년 1월, 각 후보 공약을 평가와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탈핵 지속’, ‘석탄화력 건설 중단’, ‘신공항 백지화’의 쟁점을 보았을 때 유력 후보들을 모두 “기후악당 후보”라고 평가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후보 TV토론회도 요구했지만 외면되었다. 한편 “대선과 정치권이 담지 못한 현장의 ‘바람’과 시민들의 목소리”모으기 위해서, 전국의 기후현장을 순회하기도 했다.
- 윤석열의 당선과 함께 끝난 대선에 대해서, 비상행동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비상행동은 유력 후보들을 모두 ‘기후악당 후보’라고 평가했지만, 자신들의 활동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지를 좌우하는 구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실패의 근본 이유는 “기후위기를 만들고 가속화한 경제와 정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을 정치적 주인공”으로 하는 “기후정의를 향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어떤 후보나 정당에 의탁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20대 대선에서 각기 후보를 출마시킨 여러 진보정당들이 나름의 기후정책을 제시하면서, 유력한 보수 후보들과 다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선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녹색당이 다른 진보정당들과 몇몇 시민사회단체와 구성한 기후대선운동본부는 ‘8대 강령’에 합의하면서, “기존의 연대를 뛰어넘어 ‘기후 후보’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정당과 “거대한 시민-정당 연합”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일한 ‘기후후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3) 새로운 시도들

- 한국 기후운동이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서 대중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운동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집회와 시위를 위해서 수천, 수만명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해낸 경험들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또한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걸맞는 시민들의 불복종 직접행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운동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또 급진화되면서,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의 슬로건을 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또한 기후정의의 기치 아래에 노동, 인권, 반빈곤, 성소수자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기후운동의 가장 큰 연대체로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외에도, ‘체제전환’을 내건 기후정의동맹과 같은 연대체도 조직되어 있다.

- 작년(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운동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체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기후운동 전반에서 ‘기후정의’와 ‘체제전환’과 같은 지향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 414 기후정의파업은 도전적이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세종)이라는 공간, 주말이 아니라 주중,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의 제시 필요성, “반자본주의 대정부 투쟁”이라는 성격 규정, 보다 급진적인 행동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중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대중행동’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소위 ‘요금 논쟁’으로 기후운동 안의 균열점을 확인했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성’을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체제전환을 위한 공동 요구를 작성하는데,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단순 총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토론하고 수정보완하여 더욱 견고한 공동 요구를 만들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4) 시사점

-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래,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들의 기후위기 대응은 그 이전에 비해서 크게 활성화되어 정부와 국회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필요한 사회기술적 변화의 폭과 속도, 그리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하지 않다. 특히, 기후운동의 사회적 힘이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힘으로 발휘되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기후정의운동은 많은 사회운동들이 통상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 질의/결과 공개라는 전술을 채택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진보정당들도 적극적인 기후공약 혹은 공동대선운동본부 등으로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기후정치를 제도정치 안에 진입시키는데는 실패해왔다. 대선 이후 기후정의운동은 더욱 활성화되는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운동의 세력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기후정의운동은 제도정치의 개입/참여를 포함하여 사회정치 세력화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과 토론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정의)운동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당파성이라는 입장은 재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관행적으로 채택하는 정책협약/기자회견/인터넷 홍보 중심의 전술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한편 진보정당은 기후정의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은 채 선거 시기에 닥쳐 지지를 요구하고 자원을 동원하려는 선거/정치활동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란 정당들이 기후 정책/공약을 개발하고 기후후보를 선출하며 기후정의운동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분업의 구상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한다. 체제전환의 설득력 있는 상을 구체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를 조직하는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동시적 상호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4.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 첫째,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 필요성을 확인하자!
 - 기후위기의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즉 체제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론되지 못했다. 경로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정치 질서와 정치 권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기후정의운동의 독자적인 사회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 질서와 권력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 물론 이런 선언은 ‘체제전환’이 무엇이고, 또 ‘사회정치 세력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기존의 정당들, 특히 진보정당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등에 대해서 묻는 구체적인 그리고 까다로운 질문을 야기할 수 있다. 누군가는 당을 만들자는 것이냐고도 성급히 물어볼지 모른다. ‘사회정치 세력화’를 말하는 순간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질문이고, 논의 시작점에서 어떤 질문도 배제될 이유는 없다.
- 둘째, 기후정의운동의 공동 요구(혹은 공동 강령)을 마련하자!
 - 기후정의운동이 말하는 ‘체제전환’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현재 수준에서 쟁취해야 할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자. 이를 위한 출발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기초에서 2022년의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3대 요구를

정리했다. 또 이를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 비상생동은 10가지 대선 정책요구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2023년의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도 2대 방향, 6대 요구, 13개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20대 기후대선을 위한 ‘공동선거운동본부’의 8대 강령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사회운동과 시민들이 참여/지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자.

- 그러나 체제전환과 요구가 무엇이어야 대해 토론하고 정리하는 것이 준비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토론’으로 ‘운동’과 ‘정치’를 대신하려는 편향에 대해서는 경계하자.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되겠지만, 결론과 합의의 가능성도 없이 끝도 없는 논쟁으로 역량과 시간을 허비한 일은 피하자.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 자체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 셋째, 공동 요구를 다양한 운동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끈’으로 사용하자!
 - 공동 요구를 대중적으로 확인하자. (총선 전까지는 그리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공동 요구에 대해서 선전하고, 교육하고, 토론하자. 또한 공동 요구가 완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인 것이라 간주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두자.
 - 공동 요구를 활용하여 각 사회운동이 자신의 현장에서 기후정의운동을 조직하도록 요청하고 (좁은 의미의) 기후정의운동도 각 사회운동의 현장과 연대하도록 독려하는 토대로 활용하자. (예를 들어, 작년의 화물연대 파업과 올해의 양회동 열사 투쟁을 기후정의운동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 넷째,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공동 요구를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하자!
 - 정책 질의/요구 행동을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활용해온 방법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다 버릴 수가 없다면 수정보완해서 활용하자. 공동 요구에 기반한 정책 질의/요구 행동은 적어도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 하나는 공동 요구를 정책/공약에 반영하도록 사회적 힘을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하여 과시할 방법이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중행동(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자. 그동안 질의/요구 결과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서 알려지만

그 전파력과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역동적인 전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서울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지역(예를 들어, 삼척)을 정해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조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923 기후정의행진의 의미도 이런 구상 속에서 의미를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 다른 하나는 ‘후보/지지 전술’이다. 기후정의운동의 공동 요구를 선거 공간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장외에서 조직하는 대규모 대중행동과 제도정치의 매개하기 위해서, 기후정의운동을 제도장치 내에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투쟁 지역에서 후보를 직접 출마시키거나 동의하는 진보정당 후보들과 연대/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 전 대규모 대중행동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조건과 역량에 따라서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미루지는 말자.

5. 마무리하며

- 지난 7월에 출범한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은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해야 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총선과 같은 정치적 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지 치열한 논의와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다”(9월 기후정의행진 “기조와 목적” 중에서). 이 발표문은 이러한 결의에 응하기 위한 한가지 시도다. 부족하지만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별첨.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시기의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의 대응

1) 2020년 총선

- 2020년 총선을 맞이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결집한 기후운동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기후정책에 관한 질의와 약속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정치중립적 그리고 비당파적임을 표방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의 보수정당에서부터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정당까지 모두에게 기후공약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약속의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에게 기후정당과 기후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요청하였다.¹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각 정당들에 대해서 비상행동의 정책 제안(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타의모범’, 민주당은 ‘의지박약’,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기승전책’의 평가를 받았다.² 또한 총선 직전인 4월 9일에는 지역구 후보 출마 예상상자 669명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247명(응답율 36%)의 답변을 얻은 결과, 즉 응답자의 96%가 비상행동이 제안한 기후정책에 동의를 했다고 발표했다.³ 이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정당들의 공약 분석을 통해서, 정당들의 기후정책들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에 투표에 참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⁴ 한편 그린피스는 서울지역 후보자에 대한 질의 뿐만 아니라⁵, 여론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기후정책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⁶

¹ 이는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의 다음과 같이 제시한 전술과 일치한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총선시민네트워크(2020), “[발족선언문]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http://climate-strike.kr/2230/>

² 기후위기비상행동(2022), “[보도자료]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http://climate-strike.kr/2225/>

³ 기후위기비상행동(2020), [보도자료] 21대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http://climate-strike.kr/2249/>

⁴ 환경운동연합(2020),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그린 뉴딜’ 한목소리”, <http://kfem.or.kr/?p=205699>

⁵ 그린피스(2020, “4·15 총선 여야 후보 98.5% ‘당선 뒤 그린뉴딜 추진’”,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2875/climate-suffrage-general-election/>

⁶ 그린피스(2020), “유권자 77%, ‘총선, 기후위기 대응 후보·정당에 투표’”

- 비상행동은 정책 제안을 대다수 정당이 수용했고 동의한 후보들 중에서 당선자들도 70명이나 되었다고 확인하면서,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⁷ ‘의지박약’이라고 평가받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공약을 3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했고 환경단체 출신 의원들도 등장했으니 전혀 근거가 없는 기대는 아니었다. 기대는 그해 가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결의안을 통과시면서 충족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국내외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투자를 중단시키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법’에 ‘탄소중립’의 목표만을 고쳐 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으로 <기후정의법> 요구를 대신했다. <정의로운전환법>을 제정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왜곡하고 배제하면서도 아직까지 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강행에서 보듯이 기후위기와 생태학살을 더욱 악화시킬 법 제정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주저하지 않았다. 기후와 환경을 내세워 국회 진출한 의원들조차 맞서 싸우기 보다는 본의회 표결에 불출석하거나 기권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녹색정치’ 혹은 ‘기후정치’의 한계를 드러낸다.
- 정의당과 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정책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를 개별 부문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는 보다 큰 프레임 속에서 그린뉴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성과는 저조했다. 정의당은 의석이 오히려 줄었으며 녹색당은 여전히 제도정치에 진출할 수 없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동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⁸과 함께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소개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⁹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보수정당들과 일부 기회주의 세력들의 위성정당 논란으로 정책 토론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기후정치가 자리잡고 확장될 가능성이 제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2138/climate-crisis-suffrage-greennewdeal/>

⁷ 기후위기비상행동(2020), “[성명서] - 21대 총선결과 관련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http://climate-strike.kr/2258/>

⁸ 한겨레(2020. 5. 15), “정의당, 전면적 쇄신 필요하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5054.html>

⁹ 정선영(2020),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마르크스21, <https://marx21.or.kr/article/347>

득표율에 부합하는 합당한 의석조차가 확보할 수 없었다. 가장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되었던 녹색당은 그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한채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다 실리도 없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 그림 1. 기후위기비상행동의 2020 총선 정당별 정책평가 기자회견 장면



2) 2022년 대선

-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진행된 2022년 대선에서도 기후운동 진영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책 요구를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에 대한 질의와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알려져 유권자가 투표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⁰ 우선 2021년 12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새롭게 10대 정책 요구를 토론하여 마련하였다. 2019년에 내걸었던 정책요구가 시효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진행된 투쟁과 논쟁 등을 반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아래 표

¹⁰ 아래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그린피스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린피스는 주요 후보의 공약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가진 환경단체로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현실에 기초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만들도록 요구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1609/blog-ce-election-policy-question/>

참조).¹¹ 이어서 2022년 1월에는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과거보다 기후위기 의제가 부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각 당의 정책과 후보들의 발언의 깊이와 진지함은 여전히 미흡”했으며 특히 ‘탈핵 지속’, ‘석탄화력 건설 중단’, ‘신공항 백지화’의 세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 결과까지 종합했을 때 여론조사 1-3위권 후보들을 “기후악당 후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¹²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단일의제로 다루는 원포인트 TV토론회” 개최를 후보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사에 요구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한편 “대선과 정치권이 담지 못한 현장의 ‘바람’과 시민들의 목소리”모아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 혹은 “체제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기후현장을 순회하는 행동을 조직하기도 했다.¹³

- 윤석열의 당선과 함께 선거가 끝난 후, 비상행동은 대선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한 주간지(<시사인>)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1/3 정도는 기후위기를 대선에서의 정치적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용의가 있다는 점이 상기되면서, 대선의 결과는 기후운동에게 더욱 큰 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의 ‘기후악당 후보’라고 평가했으나, (자신들의 활동으로는: 인용자첨) 유권자의 선택지를 좌우하는 구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실패의 근본 이유는 “기후위기를 만들고 가속화한 경제와 정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을 정치적 주인공”으로 하는 “기후정의를 향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어떤 후보나 정당에 의탁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¹⁴

표 1. 기후위기비상행동의 2022년 대선 정책 요구

구분	번	정책명/내용
당연	1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 기만적인 감축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 국가

¹¹ 기후위기비상행동(2022), “[보도자료]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http://climate-strike.kr/4153/>

¹² 기후위기비상행동(2022), “[보도자료] “기후악당 대선후보를 찾아라” 20대 대선 기후정책 평가 기자회견. <http://climate-strike.kr/4188/>

¹³ 기후위기비상행동(2022), “[보도자료] 기후대선과 기후정의를 전국행동 진행”, <http://climate-strike.kr/4218/>

¹⁴ 기후위기비상행동(2022), “실패한 기후대선, 기후정의를 향한 체제전환은 계속되어야 한다: 20대 대선결과에 대한 논평”, <http://climate-strike.kr/4387/>

한 요 구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2	“기후정의 하랬지, 누가 녹색성장 계속 법 만들래?” /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4	“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새롭 고 과 감 한 요 구	1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2	“지구 온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시간 단축” /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3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4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5	“기업과 부자에 세금을, 국방비와 토건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 정의로운 기후 자원 마련

- 20대 대선에서 각기 후보를 출마시킨 여러 진보정당들이 나름의 기후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류의 유력한 보수 후보들과 다르게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를 출마시킨 정의당은 20대 대선을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낼 정부의 탄생을 위한 선거”를 추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대선 제1강령으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수많은 시민들의 경험과 성과를 모두 수용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¹⁵ 김재연 후보를 출마시킨 진보당은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에너지 시스템” 등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의해서 “상당한 촘촘한 기후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백운

¹⁵ 정의당 20대 대선 강령, <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files/doct2021.pdf>

후보를 출마시킨 사회주의 공동투쟁본부는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 직접 규제와 기후정의 권력의 재구성을 강조했다”¹⁶

- 한편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녹색당은 다른 진보정당들과 몇몇 시민사회단체에게 기후대선운동본부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미래당이 동참하고, “정치와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해온 그 동안의 시민운동의 관행을 벗고”¹⁷ 문화연대 등의 몇몇 단체들이 호응하여 참여하였다.¹⁸ 이들은 ‘8대 강령’에 합의하면서, “기존의 연대를 뛰어넘어 ‘기후 후보’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정당과 “거대한 시민-정당 연합”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녹색당은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 중단 상황에서 “21세기에 자본과 용감하게 맞설 ‘기후전사’가 되줄 것을 요청하는 논평까지도 냈지만¹⁹, 결국 단일한 ‘기후후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또한 운동본부에 참여한 대선후보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 개최도 제안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신 정당과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머물렀다.

3) 새로운 시도들

- 한국의 기후운동이 2019년 9월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서 대중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운동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2019년 이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집회와 시위를 위해서 수천, 수만명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해낸 경험들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또한 여러 시민불복종 직접행동들이 기후운동 내에서 시도되면서 기후위기 해결의 절박함에 걸맞는 시민들의 행동의 급진성도 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운동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또 급진화되면서, (여전히 일부 논란도 남아 있으나) ‘기후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전환’의 슬로건을 거는데 주저함이 없다. 또한 기후운동은 전통적인 환경운동을 넘어서 기후정의의 기치 아래에 노동, 인권,

¹⁶ 진보당과 사회주의 공동투쟁본부에 대한 평가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대선 기후정책 평가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⁷ 김찬희(2022),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녹색당의 자세”, 기후대선운동본부 정치토론회(2022. 2. 4, 국회의원회관) 자료집

¹⁸ 참여한 단체는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 문화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청년기후긴급행동이었다.

¹⁹ 녹색당(2022), “[입장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자”, <https://www.kgreens.org/statement/?q=YToyOntzOjEyOjRZXI3b3JkX3R5cGUl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9457521&t=board>

반빈곤, 성소수자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기후운동의 가장 큰 연대체로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외에도, ‘체제전환’을 내걸며 급진적인 목소리를 조직하고 있는 기후정의동맹과 같은 연대체도 조직되어 있다.

- 코로나 재난의 힘겨움, 그리고 2022년 대선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 조직된 작년(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운동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00여개의 단체들이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3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을 조직하는데 성공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체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활동가들의 실무 역량도 확인되고 또 축적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민들과 사회운동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펼치며 역동적인 대중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대한 비판과 전환을 외치는 급진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먼저 조직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부터 분화되어 새롭게 조직된 기후정의동맹 사이의 불편한 긴장감을 해소하며 이루어낸 협력의 결과였다. 또한 기후운동 전반에서 ‘기후정의’와 ‘체제전환’과 같은 지향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 924의 성공과 자신감에 기반하여 2023년 4월에 조직되었던 414 기후정의파업은 여러 가지로 도전적이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세종)이라는 공간과 활동가,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조직/참여해야 하는 시민들,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의 제시 필요성, “반자본주의 대정부 투쟁”이라는 성격 규정, 보다 급진적인 행동 방식에 대한 요구 등으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높았다. 그러나 애초 목표보다 많았던 시민들의 참여와 진행된 집회와 행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확인으로 924 기후정의행진 이래 견지된 ‘대중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대중행동’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파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적 파업을 조직하지는 못한 한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414 파업의 요구와 관련된 소위 ‘요금 논쟁’으로 기후운동 안의 균열점을 확인했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토론과 조정 노력에도 일부 단체의 탈퇴는 아쉬운 일이지만, 폭넓은 연대를 위해 쟁점은 제외하는 통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앞으로도 체제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더욱 공고해져야 할 공동 요구를 작성하는데,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단순 총합하는 것이

[발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과 총선대응-기후정의동맹

아니라 쟁점을 토론하고 수정보완하여 더욱 견고한 공동 요구를 만들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끝>

[토론1]기후정치의 가능성과 기후운동의 역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1. 지난 선거 시기 기후운동의 대응에 대한 회고

- 발제문은 지난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과 평가를 잘 정리해서 담고 있다. 토론자 또한 정책제안과 응답결과 발표라는 방식의 한계도 절감하고 있고 이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동시에 이러한 한계는 ‘선거 시기’ 대응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2020년 총선 당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정당과 후보에 요구한 정책제안 -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 전환 기반 마련 - 은 (2050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이 한국사회 안에서 탄나라 소리 취급받던) 당시의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요구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요구안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건 아니었던) 적지 않은 후보들이 동의하고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다. 기후운동의 정치관여와 개입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이슈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구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라는 제도정치 안에 관철시키고 균열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기후정책의 틀거리가 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을 타겟으로 한 행동에 광범위한 단체들의 관심과 활동을 모아내지 못했다. 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기후정의 운동(연대)의 특성 상 대정부/대국회 요구안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측면도 작용한 결과다. 코로나 상황에서 행동 수단의 제약이 있었던 점도 있었지만, 한편에 기자회견과 다른 한편에서의 대규모 집회, 그 사이의 다양한 전술과 전략들이 함께 구사되었어야 했다. 그럴 때 체제전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작더라도 구체적인 변화의 지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한 작은 승리를 통한 효능감이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2.기후정치의 중요성과 가능성

-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일 수 있다.
기후위기가 우선순위의 문제(이윤vs안전, 성장vs생태, 자본의 권리vs시민의 인권 등등)라면, 한 사회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동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본의 폭주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힘은 국가권력”(김종철)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의 역할은 기후위기에 더욱 절실하다.
- 한국에서 기후정치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운동’으로서의 기후정치는 확산되는 대중운동의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로서의 정치, 곧 국가권력의 운용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아직 난망한 상태다. 기후를 우선으로 하는 생각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유권자의 1/3정도가 기후위기를 대선에서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용의가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시사인). 하지만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해결책’은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을 것인가. 현재의 기후정의운동의 요구들에 대해서 ‘유권자의 1/3이 동의하고, 선거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럼에도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조직해 나갈 것인가가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당의 상황은 어떤가. 보수거대양당체제의 한계와 함께 단일하게 묶여져 있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는 현재의 진보정당의 조건 속에서 기후정치의 실현은 갈 길이 멀다.
- 현재 한국 정치는 근본 틀(룰)이 왜곡되어 있다.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동의 자원과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길은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기후파시즘의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국민입법제, 시민의회 등)의 도입, 대의민주주의 틀의 변화(선거제도, 대통령제의 변화 등)가 절실히 필요하다.
-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근간과 지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녹색국가/생태민주공화국’). 기후정의와 자본주의 극복의 지향이 담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권리와 권리주체 (자연의 권리, 인간/비인간, 현세대/미래세대 등)가 담기고, 권리들 간의 우선순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개인과 기업의 사유권보다 시민의 기본권 우선) 기후위기 원인으로서의 자본주의 극복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과 피로 만져지는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70여년 전 제헌헌법의 사례도 상기시켜보자)

- 그런데 이러한 정치체제 변화의 과제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개혁이나 개헌보다, 먹고 사는 문제, 재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 더 큰 관심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정치는 '녹색민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기후일자리보장제, 대중교통 공영화, 주거권, 돌봄 등) '올바른' 주장과 논리에 앞서, 위기를 마주한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자세와 행동이 우선해야 한다.

3. 총선시기 기후정의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1)공동의 청사진/요구안

- 다른 세상, 다른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후운동이 외쳐온 수많은 '부정'(반대)에 대응하는 원대하고 대담한 '긍정'이 등장"해야 하며, "전면적인 변혁을 송요할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세계에 도달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나오미 클라인) 대중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미국의 '그린뉴딜', 영국의 '녹색산업혁명'과 같은 사례.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 명칭) '체제전환'과 '개별정책'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기후정의운동이 향후 10년간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 청사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 요구안(10가지든 5가지든)을 만들어보자. 이 요구안은 21대 총선 당시 기후운동의 요구안과 같이 어떤 정당과 후보든 쉽사리 전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명하고 명확한 요구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정치 안에서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제도정치 안에서 함께 싸울 기후정치인을 만들어내야 한다.

2)공동의 행동

- 선거 시기까지 다양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자. 발제문에서와 같이 “정책질의/요구 행동을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고 “대규모 대중행동(집회와 행진)”도 필요하겠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만이 아닌 더욱 다양한 기획을 고민해보자. 최근 선거법 위헌 판결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여지도 생겼다.
- 정책요구행동도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겠다. “후보 중 00명 동의”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변별력 있는 기후정의 요구안을 만들고 그에 동의하고 국회 안에서 이를 위해 싸울 정치인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 각 지역에서는 공동요구안에 공감하고 이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유권자를 조직해보자. 상징적인 지역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인원을 조직해서,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의 가능성은 어떤가?
- 발제문에서 제안한 ‘후보/지지 전술’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선거 시기 이전부터 기후정의후보(또는 녹색후보)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교육하고 사전 조직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나가자. 기후정의 운동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자신의 임기 동안 기후정의운동의 공동요구안 실현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과거 운동가 중에서 개인적인 선택과 간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의 한계를 충분히 보았다. 운동과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과 정치인 간의 조직적인 연대와 결합이 있어야만 기후정치가 힘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진보정당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기후정의 정치인이 정당을 넘어 강하게 공동협력하는 연대를 구성하고, 동시에 이 정치인들과 운동조직(개별단체가 아닌 연대기구)과의 조직적 연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운동진영의 정치인을 견인하면서 동시에 정치인의 당선 후 행보에 따라 비판 내지 지지철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끝>

[토론2] ‘사회정치세력화’라는 말에 담긴 곤혹스러움을 실마리 삼아

미류(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1. 반갑고 고마운 제안

길내는모임은 어제 <반-윤석열 전선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의 다른 전선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동맹이 비슷한 문제의식의, 조금 다르기도 한 토론회를 준비 중인데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었다. 결국 각각의 토론회를 열게 되기는 했지만 서로의 고민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었다.

‘비슷한 문제의식의, 조금 다르기도 한’ 고민들은 지금의 사회운동에 널리 퍼져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 과반의 국회나, 사회운동이 묵묵히 또는 시끄럽게 쌓아온 성과를 이어 (도움닫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발 딛을 구석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 명색이 총선이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경합하는 시간을 기대해야 하는데 진보정당들에 선뜻 기대가 실리지도 않고 보수양당구도라는 반-정치가 정치 행색 하는 걸 봐야 할 생각을 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싶고 더욱 절박하게 바꾸고 싶은데 도대체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 또는 그것과 다르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라는 제안은 현재에 대한 진단이나 앞으로의 방향 또는 과제에 관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하는 반갑고 고마운 제안이다. 더욱 많은 사회운동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론문을 준비했다

2.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총선에서 ‘기후위기’는 누구나 한 가락쯤은 뽑을 수 있는 노랫말 같은 것이 되리라 예상한다. 우선순위나 비중, 대응의 방향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말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공허한 기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인권’도 겪은 일) 이는 총선 결과 의석 수가 어떻게 배분되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대한 정치적 퇴행이다. 그래서 발제문에서는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이 읽힌다. (읽는 내 마음인가?) 그런데 과거의 ‘선거 대응’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2024년 총선에 대응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발제문은 기후 의제의 정치화 시도가 ‘정책 제안은 수용했으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한 2020년 총선, ‘현장의 바람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으나 대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2022년 대선을 돌아본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기후운동의 사회적 힘이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힘으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기후운동의 자리에 어떤 운동을 넣은들 다르지 않다. 수많은 약속들이 휴지조각이 되지만 약속도 안 받으면 어디에서 시작하나 하는 고민, 제도정치에서의 쟁점이 사회(운동)의 쟁점과 멀어질수록 더 대중적이거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시 정당과 후보에 연결시켜야 하는 곤란함. 등등.

이번 총선에서 기후 의제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각인시킬지, 어떻게 더 비중 있게 다루게 할지,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낼지 고민하는 것이라면 ‘사회정치세력화’는 지금까지의 대응과 다르지 않다. 2024년 총선에서 “운동의 사회적 힘이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힘으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이것은 ‘선거 대응’의 한계가 아니라 지금 사회운동의 현실이다. 보수양당구도의 문제가 그토록 오래, 최근 수 년간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만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제도’가 가지는 성격이다. 동시에 지금의 운동이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수 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히려 ‘운동의 사회적 힘’을 제도정치 안으로 밀어넣는 것을 사회운동의 정치적 역할로 여긴 결과가 지금의 정치 질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후정의운동이 단지 기후운동의 요구로만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사회운동의 수많은 요구들이 보수양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선별되고 배제되고 때로는 활용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부지기수로 경험해왔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반복될 때, 기후 의제가 선거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만으로 사회정치세력화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운동은 지금 자신의 사회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 만드는 것부터 도전해야 한다. 그게 가능해지는 만큼 제도정치 안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커질 텐데, 제도정치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 힘마저 소실해온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3. 정치적 힘을 만든다? 왜? 우리가?

‘사회정치세력화’라는 말을 쓰는 데서 이미 기후 의제를 관철하는 사회세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짐작된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정치 내의 세력으로 연상되는 정치세력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붙이게 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전망을 그리며 만들어온 한 시대의 운동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니더라도, 그것 없이 ‘사회정치세력화’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의 진보정당들이 그 전망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들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치적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정치 활동들을 서로 연결하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밝히며 제도정치 안에서도 쟁투를 벌이는 일 또한 필요하다. 진보정당(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얼마간은 기능의 분화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이유로 진보정당운동과 사회운동은 기능의 차이로만 인지될 뿐, 공동의 전망을 가지는 하나의 세력으로 느껴지지 않은지 오래됐다. 친연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키워드는 보수양당이 아니라는 점밖에 없다. 보수양당구도를 흔들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의 전략으로 진보정당을 강화하자고 선뜻 제안할 수 없는 현실. ‘노동자민중’이 더이상 “생존과 삶을 위협받는 이들” 모두의 이름으로 감각되지 못하고 “집합적인 의지와 대중적 힘의 결집”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보)정당’이 연상되지 않는 현재. 이 역시 냉정하게 인정하자.

다만 우리가 놓여있는 조건이 특정 운동의 과오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역사적 축적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어떤 운동을 비판하거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출발선으로 삼을 수 없다. 진보정당운동에 결함이 있어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이 스스로를 갱신하자는 다짐으로 ‘사회정치세력화’를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사회운동이 정치적 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현재의 진보정당운동을 기각/배제하는 제안일 수는 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면 각 운동의 난처함을 키우기 쉽다. 만나지리라 기대하며, 언제쯤 어디쯤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각 운동이 자신의 조건에서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은 우선 정치적 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자. 어쩌면 정치적 힘을 만들고 쌓는 일은 정당에 맡겨온 것이 사회운동이다. 오히려 사회운동은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비정치적 시민을 만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노동자라면, 여성이라면, 성소수자라면, 장애인이라면, 또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란다면,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하나의 관심사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그렇다고 공통의 정체성과 공통의 관심사가 정치적 의제도 아니라고 할 때, 사회운동은 각자도생의 시대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건넬 수 있을까. 정치를 외부화하며 비평하거나 냉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가는 도전이 필요하다.

4.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운동과 자신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체제전환’을 내세우는” 것이 기후정의운동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기후운동도 불평등을 주목하고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높을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가 ‘체제전환’에 동의하는 분파와 그렇지 않은 분파 간의 선긋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후위기 관련 의제를 다루는 운동의 총칭으로서의 기후운동과, 기후정의라는 이념 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이름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을 구분하는 것은 어떨까.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운동이 유사한 구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는 기후운동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보다 기후정의라는 목표로 얼마나 세력을 조직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후정의운동이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아마도 다른 어떤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운동이라면 그런 운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기후운동이/장애인운동이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를 멈추거나, 기후운동이/여성운동이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또는 요구해야 할까? 기후정의동맹은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연결하려 노력했고, 여러 사회운동 역시 그 제안에 호응하며 서로를 결속시키려 했다. 그러나 ‘기후정의’를 공통분모로 삼으며 모인 이들이 다시 ‘기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기후운동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불평등에 맞서는 운동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주거권운동이 노동운동이 다시 저마다의 영역에서 각자의 의제를 놓고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토론이 필요한 주제는 기후정의운동이 어떻게 ‘사회정치세력화’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여러 운동들과 함께 ‘사회정치세력화’하여 기후정의운동이 될 것인가는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체제전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가 조금 더 상상력을 펼치기 좋은 제안이 아닐까 한다. (기후정의운동의 공동 요구를 마련하자라는 제안은 기후운동을 향한 제안으로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5. 기후정의운동=체제전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잊고 살기란 점점 어려워진다. 사는 동안 ‘자본주의’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일상은 이어지고, ‘가부장제’를 떠올리는 것은 각성된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어렵다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부정의한 체제의 이름으로서 나날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말은 기후위기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건 아주 거대하고 전면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감각이 쌓인다는 말이기도 하다. 최소한 기후운동에서는 ‘체제전환’이 낯설거나 다른 말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그 내용이 선명한 것은 아니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사회정치세력화하자’고 할 때 어떤 운동들이 모일 수 있을까.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이 연결되는 수준처럼 ‘거대하고 전면적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사회운동이 정치적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에서 모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동의 ‘강령’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는 부담스러운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 안에 (혹은 공동 강령)이라고 남겨둔 마음을 읽었다. 공동의 정책요구안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고민일 것이다.

체제전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 과정은 폭넓은 사회운동 안에서 어떤 분화를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선긋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 다른 운동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이해가 있는 때에만 정확한 분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운동 안에서든, 노동운동, 여성운동 안에서든, 서로 다른 부문의 운동 간이든 그렇다. 토론이 필요한데 토론만 해서는 안 된다면, 결국 누구와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체제전환’을 선긋기를 위한 쟁점이기보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사회정치세력화하자’는 데 동의한 운동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합세해가는 실마리로 삼아보면 어떨까. 어제 토론회에서는 ‘존엄과 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탄소사회, 과로사회, 시설사회로부터 전환하자’는 데서 서로를 연결해보면 어떨지 제안하기도 했다. (짐작하겠지만 탄소-기후, 과로-노동, 시설-소수자 같은 대응구조를 허무는 것이 핵심이다.)

모인 운동들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와 같은 구호들을 떠올려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우리의 정치적 언어로(어느 당을 찍자거나 어느 후보를 찍지 말자는 언어가 아니라) 직접 말하자. 선거는 어차피 남의 잔치라는 냉소가 아니라 제도정치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우리의 전망을 정치적 힘으로 드러낼 방법을 찾아보자.

이 과정이 사회정치세력화의 출발선이거나 종착지가 아니라 “생존과 삶을 위협받는 이들이 정의로운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실현시키려는 집합적인 의지와 대중적 힘의 결집”이라는 사회정치세력화의 정의 자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않고 싶다. 모인 운동들부터 ‘정의로운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더욱 많은 운동과 대중들과 함께 ‘집합적인 의지와 대중적 힘의 결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기를.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투쟁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일이 동시에 기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운동이 저마다의 조건에서 아주 많은 새로운 일을 함께 벌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꾸준히 길을 넓혀가면 좋겠다.

6. 곤혹스러움이 실마리가 되는

발제문을 읽으며 눈에 들어온 말들은 어떤 곤혹스러움 앞에서 아직 그 뜻을 선명하게 만들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운동이 ‘비슷한 문제의식의, 조금 다르기도 한’ 고민들을 놓고 흔들릴 때, 흔들림은 취약함의 반영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의 증표다. 곤혹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갈 때 그 뜻도 선명해질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것 같은 막막함이 차츰 해소되고 어떤 역사를 이어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도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 제안은 기후정의운동이 기꺼이 그

[토론2]총선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의 기후정의운동과의 연대전략-미류(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장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많은 운동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내는모임도 힘을 만들고 모을 것이다.<끝>

[토론3-1]기후정의운동과 당운동의 재구성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정치화를 이뤄내자

장혜경(노동당 정책위의장)

1. 발제문의 기조에 대한 의견

- 기본 내용에 동의하며, 몇가지 지점에 대한 강조와 추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에 대해

- 발제문에서 언급한 ‘사회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발제문 언급대로 정치세력화는 사회세력화를 기반으로 하며, 제도정치권으로 진입에 국한되지 않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실현시키는 대중적 힘의 결집, 즉 사회권력 형성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특히 한국의 운동지형 및 정치지형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조직적 독자성’이다. 즉 ‘독자적’인 ‘사회정치세력화’이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계급(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이든, 사회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이든 마찬가지다.
-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운동의 딜레마적 상황도,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 원칙이 실종된 것에 기인한다. 즉 “민주당의 자장 속에서 체제전환의 전망을 제약받고 있는 사회운동의 현실”(발제문)과 민주대연합론과 의회주의의 결합물인 야권연대에 근거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는 모두 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준다.

3.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상호 재구성

(1)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사회운동-진보정당의 관계 설정 문제

- 전세계적 사례를 볼 때, 정치운동·당운동과 결합없이 사회운동(노동운동) 자체만으로 사회권력을 강화하거나 체제 전환(변혁)이 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한국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멀리는 4.19혁명에서부터 가까이는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까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일구지 못해, 모든 정치적 성과를 자유주의세력이 가져갔다. 변혁운동(체제전환운동)은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은 상호 밀접히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지적하듯이, 기후정의운동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당파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권력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정치지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에서 사회운동과 당운동이 밀접한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지지부진함과 정치적 신뢰의 부족 문제가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진보정당운동이 ‘독자적’ 정치를 일궈오지 못하고, ‘사회권력의 형성’ 관점에서 정당활동을 전개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과 노동(사회)운동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전세계적 차원의 체제전환운동(변혁운동)에서 나타난 두 흐름 -
 - ①전달벨트론(당은 방침 결정-노동운동/사회운동은 당 방침을 실행하는 부대),
 - ②양날개론(대중조직은 경제투쟁을, 당은 (제도)정치활동을 담당) - 이 한국 운동사회에서도 유사하게 재연되어 왔다. 그런데 이 양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운동-사회운동에 대해 ‘동원주의적/대리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양자 모두 극복해야 할 관점이다.
- 이에, 현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치의 혁신/재구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혁신의 핵심은 ‘△자유주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 견지 △진보정당운동의 ‘운동정당’으로서의 혁신과 기후정의운동의 정치세력화 추구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상호 인정한 가운데,

양자 간의 긴장관계를 내포한 ‘정치적-운동적’ 협력관계 구축 △이를 통한 체제전환운동의 정치적·사회적 힘 강화’이다.

(2)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의 재구성과 대중화

-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 둘째, 진보정당들도 기후정의를 체제전환의 비전으로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를 통해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와 ‘생태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해 나간다.”는 현 강령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풍부하게 정립해 나가려 한다. 아직 전면적인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후정의위원회’의 건설과 활동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의 대중적 확대/강화를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노동당만의 노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진보정당들과, 그리고 기후정의운동과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세력화의 핵심축으로,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가 매우 중요하다. 주로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한계지워진 현 기후정의운동(사회운동)의 현실과 적극적인 대중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진보정당의 전반적인 현실을, ‘대중화 사업’을 통해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역별 기후정의동맹 건설을 통한 지역주체 형성, 지역 차원의 기후정의운동의 조직화 등을 통해 지역과 대중에 뿌리내리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예가 될 것이다.

4. 당면 과제

(1) 총선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요구(강령) 마련, △공동요구에 근거한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에 동의한다. 덧붙이자면 이 외에, △기후정의운동의 요구 확장 및 타운동과의 접점 형성(가령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정세에서 반전-반핵과 기후정의(신공항 건설 반대-군비 확충)와의 연결성 확보) △총선 전까지 당장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대중조직에 의탁하지 않는 대중적 기후운동의 모델 창출 등을 공동으로 펼쳐나갔음 한다.
- 총선을 계기로 공동요구를 위한 공동활동(대중행동과 후보/지지 전술)에도 동의한다. 노동당은 2022년 대선시기, 대선운동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여러 사회운동조직들과 체제전환행진(“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하자-체제를 전환하라”)을 조직하여, 단순히 선거운동으로만 매몰되지 않는 행동을 조직한 바 있다.
- 후보전술과 관련해서, 노동당은 가능한 기후후보(지역후보일지, 비례후보일지는 미정)를 내서 기후정의운동의 확대에 일조할 계획이며, 준비 중인 총선공약에서도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정할 예정이다. 6월 전국위에서 결정한 2024 총선방침에서는 “노동/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 활동에 기반한 공동정책 개발 및 선거 공동 대응”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통의 기후공약, 체제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 공통의 기후후보운동의 전개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총선공간에서 이러한 공통의 활동 모색이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상호 재구성의 한 과정이 될 것이라 본다.

(2) 반자본주의-체제전환 연대(공동)운동을 건설하자.

- 총선대응을 넘어서는 대응을 고민해보자. 윤석열 퇴진운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죽워서 개주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자본주의/체제전환 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기후정의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정당운동)이 모여 기후정의-체제전환을 내건 연대운동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 단 연대(공동)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냐는 각 조직의 상황과 조건, 역량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보자.
- 이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사안별 연대를 넘는 체제전환운동으로의 결집, △당과 사회운동 간의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운동의 정치적·사회적 힘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의 대상이 되는 체제가 무엇이고, 대안적 체제가 무엇인지, 이를 지금 당장 실현하기 위한 대안과 실천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공동실천하면서, 상호협력에 기초한 ‘체제전환운동의 독자적 세력화’를 이뤄나가자.<끝>

[토론3-2] 녹색당 토론문

김혜미(녹색당 부대표)

- 녹색당은 지난 8월 5일 ~ 6일 양일간 ‘정치전략캠프’를 전국위원들, 지역당 사무처활동가들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24 총선 전략논의 2)연합정치의 범위와 규정 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여의 건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이에 해당일정에서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 폭염으로 인해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수량은 높아지는데, 호우일수는 짧아지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늘어나는데, 케이블카와 송전탑, 수 십 개의 등산로는 산의 허리를 휘감는다. 물살이는 멸종되어 가지만, 4대강은 여전히 제 생명력조차 마음껏 뿜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어느샌가 ‘기후위기’라는 말로 이야기 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의 특별함을 온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사계가 가진 임계를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 녹색당의 정당 창당 이유이자, 존립 이유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러나 기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져가는 것은 한국의 정치다. 정치의 위기가 곧 현재 기후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다고 본다. 물론 정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후관련 목표나, 의회에서 논의되는 입법,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공유되는 언론과 매스컴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폭우와 폭설로 주거권과 거처가 무너지는 모습, 폭염과 한파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가 바로 ‘인재’라는 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이 일을 초래한 결정권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물론 정치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기후운동진영은 ‘기후정의’라는 우산 아래 장애, 노동, 반빈곤, 여성, 소수자 등 기후불평등 사회에서 목소리를 잃은 시민들의 권리를

- 되찾는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동시에 924 기후정의행진이나 414 기후정의파업 등 규모있는 집회역시 이끌어냈다. 기후문제가 대중들에게 가닿는 물꼬를 트는 것뿐만 아니라 파급력을 만들었다. 또한 '체제전환'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구호를 사용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사회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논쟁은 있으나 사회운동 진영에서 공감대 형성에 일정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기후운동 진영은 급진적인 구호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2020년 총선에서 '기후후보'를 공식화 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이는 분명히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이해, 수용하지 못했거나 선거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비례위성정당 등의 사태를 겪으며 기후정치를 앞세운 정당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후퇴되는 일을 겪었다. 한편으로 기후 이슈가 보다 보편화 되면서 모든 정당이 기후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나 때로는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방식의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그런 의미에서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이번 2024 총선과 그 전에 있는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치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기후문제를 정치화할 수 있는 주요 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이상 기후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정치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당의 역할 중 하나인, 행정부 견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윤석열 행정부는 기후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원전 확대정책, 방위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과 평화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통치를 하기 이르렀다.
- 하지만 발제문에도 나와있다시피 현재의 문제를 거대양당에게 힘을 주는 방식 또는 '민주대연합' 따위의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사태를 키운 주범이고,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무용하게 만든 주요 정당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때보다 진보·대안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져야 할 시기라고 녹색당은 보고있다. 이에 녹색당은 기후국회, 기후정치를 위한 보다 넓은 의미의 기후정치플랫폼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²⁰ 같은 위성정당과 달리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당법으로 인해 과소대표되고 제대로 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정당들의 연합은 중요하다.

- 그러므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녹색지방정부’의 비전과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기후구청장 단일후보와 2024년 총선에서 기후정치 실현을 위한 연합정당의 출범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서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최대피해지역인 것과 더불어 9호선 압사문제, 대형 정전, 주거지역 화재등의 문제를 거듭하여 겪고 있다. 강서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삶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운동과 더불어 그 열망을 조직하여 사회적 변화로 만들 수 있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 녹색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작성한 ‘기후정의조례’를 중심으로 강서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후보출마전략을 선택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 전 가장 큰 선거이자, 양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과 신당, 새로운 정치조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거로서 2024년 총선에서 기후의제가 핵심적인, 선거승리의 요인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치, 정책 기조는 녹색당으로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기후정의의 기본출발은 ‘탈핵사회’로 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만능주의와 성장중심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모든 생명의 번영과 복지의 기본인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녹색당은 탈핵과 기후정의, 그리고 이를 실현할

²⁰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하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당시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의 성격보다 위성정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된 선거법에서 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방식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위성정당’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평등을 시민들의 삶과 안전과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사회적 과제이자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투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기후정의운동이 준비하는 '체제전환'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대안정치가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정치는 늘 시끄럽고,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온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냉소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에 녹색당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정의운동과 이곳에 모인 진보정당들이 자주 모여 의견과 마음을 나눌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기를, 또 마련될 수 있도록 바라고 노력하겠다.<끝>

[토론3-3]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치의 공진화(coevloution)를 위하여

이현정(정의당 부대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의당의 위기와 녹색정치

20년이 넘는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 중 대부분의 진보정당에서 녹색은 부문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중심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되지만 했을 뿐, 당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각 사회영역의 문제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동하거나,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왔다(이현정, 2015; 이현정, 2020). 정의당의 경우도 10년의 역사 내내 녹색의 가치가 중요함을 강조해 왔고, 21대 총선에서는 그린뉴딜을 전면으로 내걸고 20대 대선에서는 불기차(불평등/기후위기/차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모순임을 선언하며 녹색정치를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발제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소개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 지금까지의 정의당은 단기적인 대응이나 부문 운동의 한계를 넘어 당 활동가들과 당원들에게 녹색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당 차원에서 녹색운동을 전면화하는 단계로 이르지 못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급진화되고 있는 녹색/기후 운동의 탈성장 논의나 신자유주의 질서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향들을 뒤쫓아 가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현정, 2023).

이러한 상황은 지금 정의당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의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창당을 결의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다. 누군가는 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임을 표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후정의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 위기는 정의당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했으며, ‘작은’ ‘원내정당’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의해 원칙이 흔들리며, 이도 저도 아니었던, 그리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의당의 이중적 위치는 중앙정치와 지역 당부의 괴리와 갈등을 유발하거나 원내정치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는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애초에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정치권력다툼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런 모습이 기득권 양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명확히 선택/선언해야 하며, 기후위기의 주범인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기득권 정치, 이 정치와 손잡고 있는 대기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발제문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보수당인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역시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가덕도특별법에 찬성한 것은 우연이나 단기적인 지역구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그 안의 정치인들의 지역기반이 토건, 토호세력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밀어붙인 것도, 평택 대추리 행정대집행을 밀어부친 것도 참여정부였다. 과거 민주화 세력이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악을 막기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의 인사가 개별적으로 픽업되어 ‘수혈’되면서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과 자본에 상당 부분 포섭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고 반윤석열, 민주연합론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킨 촛불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

정의당 역시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재창당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정의당 7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안건 4] 혁신재창당 추진방안 승인의 건의 ‘세력재편 추진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안을 채택한 바 있다.

1. 정의당은 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2. 신당추진을 위해 당 대표 산하에 <신당추진 사업단>을 구성한다. 사업단을 통해 대상 세력들의 지향과 실체가 분명히 확인되면 신당추진 대중적 참여 운동 등 공동의 실천 사업과 함께 신당추진 합의안 마련을 위해 참여 세력들과 <연석회의>를 운영한다.
3. 합당이나 통합이 어려운 세력과는 사회개혁을 향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보4당과 민주노총,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실천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시기 공동 공천전략 등 다양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역시 대중들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무당층이 30%가 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불평등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개혁을 향한 더 큰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발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는 구체적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과 여러 부침을 겪고있는 진보정당운동의 동시적 상호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데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생태학 용어를 빌려와보면 이타적 공진화(mutualistic coevolution)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공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정치 세력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조의 변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생태환경을 정치경제체제의 외부에 위치시키면, 논의가 생태적 한계에만 집중되며 문제를 유발한 정치경제적 토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레디앙, 2020). 반면 정치경제구조에만 집중해서 생태적 한계와 지역/현장을 등한시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서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공진화의 첫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운동은 ‘현재 정치 질서와 권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존하는 구체적인 세력들을 바탕으로 전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입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윤석열 당선 이후에 남긴 평가를 넘어, 어떻게 진보정치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 스스로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진보정당들 역시 기후정의운동과 녹색 세력을 동원하거나 수혈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 ‘운동’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공진화의 조건 -신뢰와 협동

진보정치/정당들과 기후운동이 힘을 모아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와 요구를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위해서 정치협오는 함께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정치개혁의 이슈들이 정치인 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정치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함께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하는 한편, 진보정당들이 기득권 정치세력, 거대양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은 분야별 전환의 필요성이나 당사자별 구체적 과제와 함께 이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세계관과 원칙 아래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고 엮어내는 활동을 당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민사회 탈석탄법(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법)을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나, 정의로운 전환법을 노조/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과정은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관계를 넘어 보다 강고한 연대/연합의 기후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정의당 내 토론회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허구적인 중산층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이현정, 2023). 지난 414를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에너지 요금 논쟁은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의 지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소화하면서,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별개의 위기가 아님을 인식하고 기후정의의 관점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마치며 -당부와 다짐

마지막으로는 당부와 다짐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위기가 상수가 되어버린 시기에 기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의 안정적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탄력성을 복원/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회복탄력성과 공진화를 위해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진보정당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이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힘들지만 옳은 길을 갈 때는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는 것은 진보정당들이 ‘진보’정당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반대로 정의당 내에서는 급진화되고있는 기후정의운동의 담론들을 내면화하고 운동이 확장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노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한다.<끝>

[참고문헌]

레디앙, 2020, "지금 정치·경제 구조 내에서 기후위기 극복은 어려워"

(<http://www.redian.org/archive/147984>).

이현정, 2015,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 -오래된 미래, 녹색과 적색의

만남과 엇갈림 (<http://www.redian.org/archive/92196>,

<http://www.redian.org/archive/92208>).

이현정, 2020, 녹색정치와 진보정당, 미래를 말하다 -생태사회주의 정치 가능할까?

(<http://www.redian.org/archive/146834>,

<http://www.redian.org/archive/147017>).

이현정, 2023, 기후정의와 생태주의를 전면화하는 진보정치가 필요하다, 정의당

혁신재창당 사회비전 연속토론회2 -생태 전환 토론문, 2023.6.7

[토론3-4]“각자도생을 넘어, 진보정치가 기후정의운동을 책임지자!”

진보당 정책국장 박태우(진보당 기후특위 간사)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이며,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일찍이 이런 사태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짹짹 지나가고 있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기후위기 총력대응을 시작하고, 국회는 관련 입법에 매진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현시기 기후정의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발제문에 적극 공감합니다.

〈진보당이 개척하고 있는 기후정치의 길〉

진보당은 현재 97,000명의 당원이 있고, 그중 노동자 당원 64,000명, 농민 당원 5,000명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하는 정당입니다. 지역과 현장, 거리에서 투쟁하며 아래서부터 힘을 축적하여 창당 6년 만에 10만 당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기초단체장으로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총 21명의 당선자를 냈고, 2023년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어 원내정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주민생활 밀착형 민생정치’의 힘이었습니다.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기성정치가 외면하는 영역의 의제들을 지역 당사자와 주민, 단체들과 힘을 모아 정책화하는 활동(가령 ‘주민대회’등)이 적중했습니다. 이에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조례’ 등을 통과시키며, 진보정치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를 재선거 과정에 확인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책임질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복합경제위기 시대에 △대출금리 인하운동과 가계부채 상담, △난방비 폭탄 대응과 필수에너지 무상공급, △전세사기·강통전세 대응 등 민생의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 시민들의 호응으로 택배노동자 무명정치인 강성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하는 <선명야당>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대안정당>을 표방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의 격돌과 이합집산이 난무하고, 진보정당의 단결도 쉽지 않은 조건에서, 진보당의 총선 승리 전략은 ‘자강’입니다. 영호남 다수당선, 수도권·중부권의 원내입성, 정당득표 5% 등으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당선을 목표로 8월 현재 67명의 총선 후보가 조기에 총선 태세를 갖추고 뛰고 있으며, 향후에 추가로 총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광주에서 1박 2일간 1만 당원의 정치축제로 ‘정책당대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슬로건으로 진보당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강령 선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기후정치와 비전을 강령으로 명문화하고, 당내 공론화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의 주역으로 전 당적 태세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공급’,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등 기후민생 정책을 전면화하는 과정도 동반됩니다.

10월에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권혜인 후보가 6월 말 출마 선언을 하고, 이미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450명의 수도권 당원들이 강서지역에서 집중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이미 밑바닥 민심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항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국민 46%가 공감한다고 밝힌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작년 말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결과입니다. 정권퇴진, 일본 핵오염수 반대, 노조탄압 중단 등 이른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오염수 투기저지 투쟁, 9.23 기후정의행진, 11.11 민중총궐기 등을 규모있게 전개하며, 반민생·반민주·반노동·반기후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진보정치가 기후정의운동을 책임지자〉

현재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논의하고 있고, 진보4당과 함께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단결 실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각자도생’ 진보정치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이 획득한 총 득표는 2.5% 수준으로 민주노동당이 원외였던 2002년 대선시기 권영길 후보의 3.9%에 못 미칠 만큼 부족했습니다. 한편 작년 민주노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필요하다’가 90.1%, ‘2022년 지방선거 후보후보 단일화 잘했다’가 91%로 나오는 등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지난 대선시기 시사i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후보 지지’가 38.8%, ‘기후공약이 중요하다’가 36.8%로 나오는 등 기후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갈망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진보정치는 이 잠재된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실험대에 오를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와 기후정의운동은 희망이 될 것인가, 또 좌절할 것인가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단결을 실현해야 합니다. 진보가 각자도생을 넘어 단결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보정치가 단결하여 기후정의운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기후정의 세력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후정의운동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발전시켜가는 지름길입니다.<끝>

메모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홈페이지: <https://www.climatejusticealliance.kr/>

MAIL: climatejusticealliance21@gmail.com